

하남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731
----------	------

제출연월일 : 2023. 8. .

제 출 자 : 하 남 시 장

1. 개정이유

-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한시 조례의 유효기간이 2023년 종료됨에 따라 부칙의 유효기간을 삭제함으로써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주민의 지속적인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 유효기간을 명시한 부칙 삭제

3. 개정조례안 : 덧붙임

4. 관계법령 발췌서 : 덧붙임

5. 신·구조문 대비표 : 덧붙임

6. 예산수반 사항 : 덧붙임(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7. 입법예고 결과

가. 예고기간 : 2023. 7. 19. ~ 2023. 8. 8.(20일간)

나. 의견내용 : 의견 없음

8. 부서협의 결과

가. 규제개혁 관련 협의 : 해당 없음

나. 성별 영향평가 : 의견 없음

다. 부패 영향평가 : 의견 없음

9. 참고사항 : 덧붙임

가. 사회보장사업 컨설팅 신청서

나. 사회보장사업 컨설팅 결과

10. 관련부서 : 경기도 복지정책과

하남시 조례 제 호

하남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남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례 제2129호 하남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부칙 제2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서명		복지정책과
입 안 자	부서장 직위 · 성명	복지정책과장 박 종 현
	팀장 직위 · 성명	복지기획팀장 지 종 수
	담당자 성명 · 전화번호	이소연 (790-5723)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하남시조례 제2129호 하남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부칙</p> <p><u>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23. 12.31.까지 효력을 가진다.</u></p>	<p>하남시조례 제2129호 하남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부칙</p> <p><u><삭 제></u></p>

참고사항


「하남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의 사회보장제도 협의 대상 여부 확인

1. 사회보장사업 컨설팅 신청서

서식 5] 사회보장사업 컨설팅 신청서 양식 - (각부처 자체제⇒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사업 컨설팅 신청서

1. 신청 개요

신청 정보	기관명	경기도 하남시청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담당자	성명	최화연	소속부서	복지기획팀
		직위	지방사회복지서기보	연락처	031-790-5723
컨설팅 요청 사항	컨설팅 목적	조례에 대한 협의 대상 유무 확인			
	사업 계획 수립 단계	<input type="checkbox"/> 부서 내 기획 <input type="checkbox"/> 기관 간 예산 협의 단계 <input type="checkbox"/> 국회/의회 심의 단계 <input type="checkbox"/> 신설·변경 신청 후 협의단계 <input checked="" type="checkbox"/> 기타 (조례 제정[2023.02.23.])			
	주요 컨설팅 희망 항목 (중복체크)	<input type="checkbox"/> 성과지표 <input type="checkbox"/> 지원대상 <input type="checkbox"/> 지원내용 <input type="checkbox"/> 전달체계 <input type="checkbox"/> 소요재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기타 (조례 검토)			
	희망 컨설팅 항목 상세 내용	하남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의 사회보장제도 협의 대상 유무를 확인하고자 함.			
	컨설팅 방식	<input type="checkbox"/> 대면 컨설팅 <input checked="" type="checkbox"/> 서면 컨설팅 <input type="checkbox"/> 온라인(유선) 컨설팅			
	<p>위와 같이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사회보장사업 협의지원단 컨설팅」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23 년 5 월 8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인: 최 화 연 </p> <p style="text-align: center;">보건복지부장관 귀하</p>				

2. 사회보장사업 컨설팅 결과

1. 컨설팅 개요						
사업명	저소득층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 제정 관련					
신청 지자체 (기관)	경기도 하남시	컨설팅 시행일	2023.5.9.(화)			
컨설팅 회기	1 회	컨설팅 방식	<input type="checkbox"/> 대면 컨설팅 <input checked="" type="checkbox"/> 서면 컨설팅 <input type="checkbox"/> 온라인(유선) 컨설팅			
2. 컨설팅 인력 구성 현황 ※ 컨설팅 참여 인력						
성명	소속	직위	담당업무 및 역할	비고		
최현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실장	정책컨설팅 총괄			
장아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컨설팅 및 행정 지원			
<table border="1"> <tr> <td>핵심 논의 사항</td> <td>1. 협의 제외대상으로 판단</td> </tr> </table>					핵심 논의 사항	1. 협의 제외대상으로 판단
핵심 논의 사항	1. 협의 제외대상으로 판단					
4. 세부 검토 내용						
핵심 논의 사항						
컨설팅 내용	1. 협의 제외대상으로 판단됨					
	<input type="checkbox"/> 「2023 사회보장제도 산실·변경 협의 운용지침」상 협의 제외 대상인 '법률/조례안'에 해당하므로 반려 대상임 <input type="checkbox"/> 사회보장사업 시행의 근거 되는 법률안 또는 조례안 자체는 협의 제외대상임					
본 컨설팅 관련 추가적인 안내가 필요한 경우 협의지원단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협의지원단(044-287-8100, center380@kihasa.re.kr))에게 문의 바랍니다.						

관계법령 발췌서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약칭 : 기초생활보장법)

[시행 2023. 6. 5.] [법률 제19228호, 2023. 3. 4.,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12. 30.>

1. “수급권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2. “수급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수급품”이란 이 법에 따라 수급자에게 지급하거나 대여하는 금전 또는 물품을 말한다.
4. “보장기관”이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실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5. “부양의무자”란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다만,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한다.
6. “최저보장수준”이란 국민의 소득·지출 수준과 수급권자의 가구 유형 등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제6조에 따라 급여의 종류별로 공표하는 금액이나 보장수준을 말한다.
7. “최저생계비”란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으로서 제20조의2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계측하는 금액을 말한다.
8. “개별가구”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거나 이 법에 따른 자격요건에 부합하는지에 관한 조사를 받는 기본단위로서 수급자 또는 수급권자로 구성된 가구를 말한다. 이 경우 개별가구의 범위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 “소득인정액”이란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10. “차상위계층”이란 수급권자(제14조의2에 따라 수급권자로 보는 사람은 제외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을 말한다.

11.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말한다.

제4조(급여의 기준 등) ① 이 법에 따른 급여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② 이 법에 따른 급여의 기준은 수급자의 연령, 가구 규모, 거주지역, 그 밖의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급여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거나 급여를 지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4. 12. 30.>

③ 보장기관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개별가구 단위로 실시하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인 단위로 실시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인 보장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급여의 범위 및 수준을 초과하여 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보장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 및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14. 12. 30.>

2 「사회보장기본법」

[시행 2021. 12. 9.] [법률 제18215호, 2021. 6. 8., 일부개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보장”이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한다.

2. “사회보험”이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3. “공공부조”(公共扶助)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4. “사회서비스”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5. “평생사회안전망”이란 생애주기에 걸쳐 보편적으로 충족되어야 하는 기본 욕구와 특정한 사회위험에 의하여 발생하는 특수욕구를 동시에 고려하여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제도를 말한다.

6. “사회보장 행정데이터”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법인이 법령에 따라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자료 또는 정보로서 사회보장 정책 수행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증진하는 책임을 가진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에 관한 책임과 역할을 합리적으로 분담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발전수준에 부응하고 사회환경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고 매년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사회보장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를 격년으로 실시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비용추계서(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해당없음

2. 비용추계서 미첨부 근거 규정

○ 「하남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항제2호

제9조(비용추계서 작성) ①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 78조에 따라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조례안 등을 발의 할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②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소관부에서 별지 서식에 따라 작성하되 사전에 예산담당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추계 내용을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선언적·권고적 형식 규정 등

○ 조례에 포함된 사업의 경우 재정이 수반되지만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 대상 및 지원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필요한 재정규모를 예측할 수 없어 추계가 어려움

4. 작성자 :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장 박 종 현